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보건복지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
	중증외상 진료체계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과장 이동훈, 사무관 전은정 (044-200-2293, 2294)
	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과장 박재찬, 사무관 정다솜 (044-202-2550, 2556)

중증외상 진료체계를 개선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.

- ▶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 3대분야 27개과제 개선
: 권역외상센터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'15년 21.4% → '25년 10%
- ▶ 외상센터 진료여건 개선 : 간호인력 확충,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20% 확대 등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2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」을 심의·확정하고, 「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사후관리」에 대해 토의했습니다.

* 참석 : 국무총리(주재), 과기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중기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경찰청·소방청장 등

◆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(복지부)

□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·수술('17.11)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·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병원 전 단계)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, 응급실 분포·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(Trauma map)를 마련하겠습니다.
 - 또한, 의료·소방·군·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- (병원 단계)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 -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전담 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% 확대하겠습니다.
 - 또한,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,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
- (인프라) 복지부·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-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시·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*을 2025년까지 현재의 2β 수준(15년 30.5%→25년 20%)으로,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(15년 21.4%→25년 10%)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

- ※ (붙임) 1.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방향
- 2.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과제
- 3. 「중증외상 진료체계」이렇게 달라집니다!

※ (별첨)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

비전

전국 어디서나, 언제든지 양질의 외상진료서비스 제공

국 민

신속하고
전문적인
외상치료

의료진

자긍심을 갖고
진료에 전념할 수
있는 환경 조성

의료기관

진료수준에
상응한
합리적 보상

목 표

- ☞ 전국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: 30.5%('15)→25%('20)→20%('25)
- ☞ 권역외상센터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: 21.4%('15)→15%('20)→10%('25)

병원 前



적절한 응급처치 및
신속한 이송 서비스 제공

- 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
- ☑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
- ☑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
- ☑ 헬기 이송체계 강화

병원



외상센터
진료역량 강화

- ☑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
- ☑ 외상전문인력 양성
- ☑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
- ☑ 외상진료의 질 향상

인프라



중증외상진료체계
기반 조성

- ☑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
- ☑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

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과제

- 3대 분야, 10개 중과제, 27개 세부과제



I 병원 前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 서비스 제공

중 과 제	세 부 과 제	주관부처	협조부처
1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	[1] 병원 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 ('18~)	보건복지부, 소방청	-
	[2] 응급구조사의 중증외상 처치·분류 능력 제고 ('18~)	보건복지부	소방청
2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	[3] 대국민 외상환자 응급처치 매뉴얼 마련 ('19~)	보건복지부	-
	[4] 이송 중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('18~)	보건복지부	-
3 중증외상환자적정병원 이송	[5] 지역별 이송지침 및 환자이송지도 마련 ('18~)	보건복지부, 소방청	-
	[6] 119구급대-권역외상센터 의료지도체계 구축 ('18~)	보건복지부, 소방청	-
4 헬기 이송체계 강화	[7]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('18~)	보건복지부, 소방청, 국방부	-
	[8] 닥터헬기 운영 확대 ('18~)	보건복지부	-
	[9] 헬기 착륙장 확충 및 관리 강화 ('18~)	보건복지부	소방청

II 병원 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

중 과 제	세 부 과 제	주관부처	협조부처
5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	[10] 외상전담전문의 지원 확대 ('18~)	보건복지부	-
	[11] 권역외상센터 간호인력 확충 ('18~)	보건복지부	-
	[12] 교수·정규직 정원 확보 ('18~)	보건복지부, 교육부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	-
6 외상전문인력 양성	[13]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 ('18~)	보건복지부, 국방부	-
	[14]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 ('18~)	보건복지부	-
	[15] 권역외상센터 內 전공의 파견 ('18~)	보건복지부	-
	[16] 외상전문 수련센터 확대 ('18~)	보건복지부	-
7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	[17] 진료 심사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한 손해방지 ('18~)	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	-
	[18] 건강보험 수가 개선 ('18~)	보건복지부	-
8 외상진료의 질 향상	[19]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('18~)	보건복지부	-
	[20] 중증외상진료와 의료기관 평가 연계 강화 ('19~)	보건복지부	-
	[21] 진료역량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('19~)	보건복지부	-

III 인프라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조성

중 과 제	세 부 과 제	주관부처	협조부처
9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	[22]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 개편 ('19~)	보건복지부	-
	[23] 점검·행정조치 강화 ('18~)	보건복지부	-
10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	[24]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제공 ('18~)	보건복지부	-
	[25] 시·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('18~)	보건복지부	-
	[26] 외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('18~)	보건복지부	소방청
	[27] (가칭)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·운영 ('18~)	보건복지부	-

「중증외상 진료체계」 이렇게 달라집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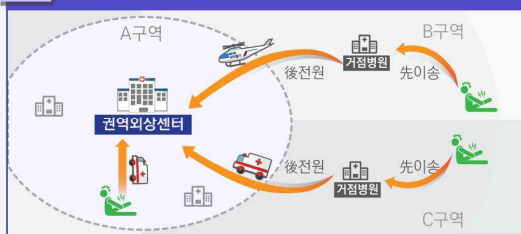
전국 어디서나, 언제든지 양질의 외상진료서비스 제공

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(%)



현행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송지침 활용

개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송체계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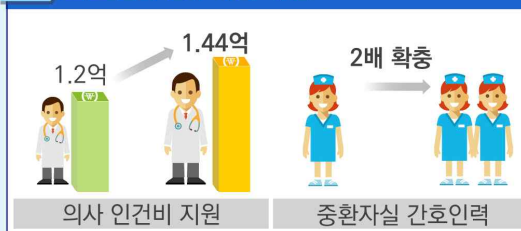
현행 초기 외상처치 교육 프로그램 미흡

개선 119구급대원, 일반국민에 외상처치 교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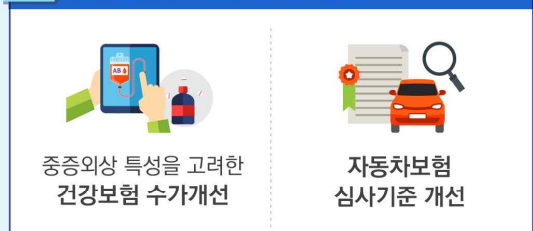
현행 중증외상은 의료진의 대표적인 기피 분야

개선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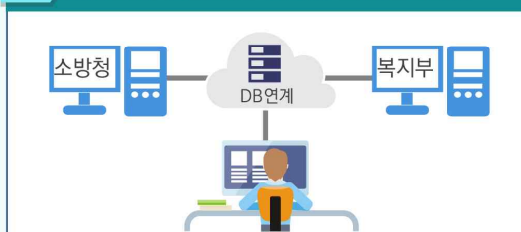
현행 중증외상 특성을 고려 않은 심사·급여기준

개선 진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



현행 소방청-보건복지부 간 응급정보 연계 미흡

개선 현장에서 진료까지 촘촘한 외상모니터링



현행 정부-현장 간 소통 부족

개선 정례화된 민관협의체 운영

